

수 신 편집국장 · 보도국장

참 조 미디어 담당 기자

발 신 전국언론노동조합

---

## 문재인 정부는 언론개혁 정책공약 이행하라!

---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권은 결국 촛불 시민의 힘으로 몰락했습니다. 촛불의 염원을 이어받아 2017년 5월 대선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론개혁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3. 2020년 4월 총선에서 180석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의 집권 여당을 만들어줬으나 여전히 언론개혁은 한 발짝도 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방송기자연합회, 방송독립시민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이상 6개 단체는 대통령이 약속한 언론개혁에 대한 시급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01월 06일(수) 오전 11시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프레스센터 1802호) 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끝>

첨부 1 : 기자회견문

첨부 2 :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과 언론노조와의 정책협약

첨부 3 :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과 언론노조와의 정책협약

## 2021년 언론노조 ·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무엇이 새로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 대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고, 수많은 노동자, 자영업자,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존의 절벽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럼에도 백신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이 보인다. 우리에게 새해란 지금이 아니라 다시 예전으로, 그러나 예전과는 다른 일상으로 돌아가는 때가 새로운 해가 될 것이다.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올해, 언론계에 종사하고 끊임없이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우리는 코로나만큼이나 언론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나아질 기미를 보지 않음에 깊은 반성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우리는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서 바꾸지 못한 취재 보도의 관행을 반성하고 저널리즘의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라는 시민의 명령을 듣는다.

믿을 수 있는 언론, 신중한 판단을 내릴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국가와 시민 사이 소통을 독려하는 언론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삶과 노동의 위기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임을 올해 우리는 다시 확인한다.

우리는 오는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로 시작될 정부여당의 정치적 계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태일 3법을 처리하지 못한 180석의 거대 여당은 정권 재창출보다 삶의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언론개혁이 가짜뉴스 규제와 징벌적 손해와 같은 처벌 그 이상임을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줄 코로나 이후의 삶에서 정치권력, 자본권력, 사주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 빠질 수 없다. 무엇보다 통신 3사의 자본권력은 이제 신문과 방송을 넘어 과기부의 진흥 아래 공적 서비스인 통신과 뉴미디어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이후 진흥하겠다는 디지털 뉴딜에서는 사업자만 보일 뿐 시민은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 약속했던 공약을 기억한다. 공영방송/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민영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 신문법 개정, 포털이 장악한 뉴스 시장의 공론장 구축, 지역 언론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미디어 산업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쪼개놓은 통합 미디어기구의 설치가 그것이다. 언론개혁은 언론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얻을 법과 제도가 동력이 되어야 한다.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2021년은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언론개혁을 마무리 할 마지막 시기다.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걸 청와대와 여당에게 분명히 밝힌다. 언론노동자와 시민이 제시한 언론개혁의 로드맵을 또 다시 차기 정권의 과제라 미루지 말길 바란다. 올해 문재인 정부에게 필요한 언론은 성과를 보여주고 야당을 비판하는 언론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에서 보지 못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보여주는 언론이다.

2021년 새해는 언론개혁의 공약이 완성되는 그 때 시작될 것이다. 아직 우리에게 새로운 해는 오지 않았다.

2021년 1월 6일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방송기자연합회, 방송독립시민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가나다 순)**

민주 · 인권 회복

# 4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온라인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상의 인터넷실명제 폐지
-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
- 인터넷 언론 자유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요건 법제화
-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

민주 · 인권 회복

# 5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습니다

-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 ·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추진
- 보도 · 제작 · 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의 분리 · 독립, 편성위원회를 방송사업자와 취재 · 제작 · 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보도 · 제작 · 편성의 자율성 확보 추진
- 특혜없이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
- 이명박정부 및 박근혜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 · 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 · 원상복귀 및 언론탄압 진상규명 추진

- 비전 I
- 비전 II-1
- 비전 II-2
- 비전 III
- 비전 IV
- 재원조달방안
- 수혜계층별방안
- 별첨

# 1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 종편·보도전문채널·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위상 강화와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 등으로 시청자 주권 보호
-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여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추진
- 미디어 활용능력과 비판적 이해 능력 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추진
-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징수·배분 등 관리·감독 강화

# 2 지역방송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실현하겠습니다

- 지역민의 미디어(방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미디어센터 육성·지원 확대
- 지역 소통과 참여의 공간인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 추진
- 지역방송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건강한 지역방송의 지배구조 등 개선
- 지역방송 지원 예산의 현실화 및 예산의 콘텐츠 개발·유통 지원에 특화

# 3

## 신문의 진흥과 지역신문 지원으로 건강한 신문언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장을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로 건전한 신문시장 활성화 추진
-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 지역신문 지원 확대 추진
  -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및 지역신문의 디지털 사업·재교육 지원 확대 방안 추진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진화하고, 지역신문발전 위원회의 위상 강화

# 4

##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축으로 한류 르네상스를 실현하겠습니다

- 미디어 산업 성장과 시청자 선택권 강화
  - 다양한 전문편성 PP, 온라인 동영상, 개인 방송 활성화 추진
  - 중수제작자의 콘텐츠 제작을 장려할 수 있는 공적 기금 확충 추진
  - 전문편성 및 자체제작 비윤 높은 방송사 지원으로 방송콘텐츠의 질적 개선 추진
  -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미디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투명성 확보
- 매체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환경 조성
  - 글로벌 콘텐츠 제작 지원 확보를 위한 분합리한 규제 정비
  - 협력적 경생을 통한 공신화(尙進化)·유효경쟁 체제 구축
  - 전국과 지역이 공존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
- 방송광고시장 합리화를 통한 미디어 공공성 확보
  -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시장 내 상생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합리적 제정
  - 정부·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민간기업의 홍보 등 광고주와 결탁된 홍보성 방송광고 거래 근절 및 협찬광고의 투명성 확보

##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 정책 협약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는 상호 협의를 통해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가 새로운 민주주의 건설의 핵심 과제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정책 과제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1. 언론적폐 청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적 해고를 당한 해직 언론인의 복직은 언론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막을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개악된 신문 및 뉴스통신사 편집권 독립의 복원을 위한 법 개정이 시작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종편의 특혜 철폐 또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언론 적폐이다.

**2. 미디어 규제체계의 개혁:** 미디어 산업과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노동자와 이용자 권리의 강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노동자와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미디어 규제·진흥 체제 재정립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한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중소 출판사와 서점, 노동자들이 위기에 빠진 출판 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에 노력한다. 공공성의 공백지대에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공적 책임을 부여한다.

**3. 공영방송의 자율성 강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 자본에서 자유로운 언론은 오직 시청자와 독자들에게만 책임을 진다. 공영방송에는 차별화된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는 시청자의 대표 기구로 위상을 분명히 한다. 의견 제시에 그치고 있는 공영방송의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 지역 공영방송 및 MBC 자회사의 사장 선임 절차를 개혁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4. 공적 소유 언론의 정상화:** 공영언론은 관련법에 의해 공영방송·언론의 지위에 있지 않으나 지분 소유 및 지배구조를 통해 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언론사들이다. 보도전문채널 YTN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인 서울신문 또한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한다. 재원의 고갈로 구조조정의 위기에 임박한 아리랑TV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5.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미디어 시장 변화 과정에서도 민간 사업자들의 공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소유지분 제한을 강화하고, 지상파 방송사가 지회사로 속한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지상파 민영방송 사장의 선임에도 최소한의 공적 절차를 도입한다.

6.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가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광고 시장에서는 오직 광고주의 이익과 포털 사업자의 지배력만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 광고시장에서는 시장 논리 뿐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노동의 가치와 이용자의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광고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할 제도적 방안을 구축한다. 위축되고 있는 방송광고 시장 내 경쟁에서 지역 지상파 방송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고, 광고협약을 통한 중앙방송사의 개입을 금지한다. 정부광고의 불균등한 배분을 통한 간접적 정부 통제를 혁파한다.

7.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다양성의 확보는 지역성의 강화에서 시작된다. 지역신문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지역신문발전법을 개정하고, 부당하게 지역으로 시장을 넓히는 중앙신문의 지배력 확대를 제재한다. 방송 관련 각종 위원회 및 유관기관에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유료방송 규제 정비에도 지역 방송과 시청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지역 방송의 지역성 제고를 위해 자체 제작 비율을 높이고, 지역 공영방송의 일방적인 통폐합을 중단한다.

8.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적 기금 신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매체별로 분리된 공적기금은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분리된 각종 미디어 관련 기금을 미디어다양성 기금으로 통합하고, 미디어 지역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운용한다.

2017. 4. 24.



위원장

김한권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 방송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미디어 생태계 개선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스마트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혁신 콘텐츠 활성화 지원

- 다양한 장르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확대
- 새로운 트렌드형 콘텐츠 제작·유통을 위한 1인 크리에이터(Creator) 및 MCN(Multi Channel Network) 지원·육성
- PP(Program Provider)와 독립외주제작사의 혁신형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콘텐츠 수출·유통 지원 강화
- 이용자 접근성 강화 및 콘텐츠의 다양한 파급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개발 지원

## 방송영상미디어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 국내 미디어기업 상호 간, 국내 미디어기업과 해외 미디어기업 간의 부당한 수익 배분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강화
-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통합 대가 산정 기준' 마련
-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이해관계자 간 상생 협력 및 균형발전을 위한 '유료방송콘텐츠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역차별 개선

-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업자의 합당한 정보통신망 이용대가 부과 등 국내 사업자 동일안 기준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 부과 강화

-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업자의 국내 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및 법제 일원화 추진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미디어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미디어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부재
-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 부서를 통합하여 미디어 콘텐츠 전담 부서 일원화 추진
-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 법률을 통합, 단일 미디어콘텐츠법 제정 추진

##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운영 추진

- 급변하는 미디어시장 및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한 혁신적 미디어 정책 수립 필요
- 미디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미디어 혁신기구 설치·운영 추진

##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약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제안과 정책공약의 상호협의를 통해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가 21대 국회의 핵심 과제임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정책 과제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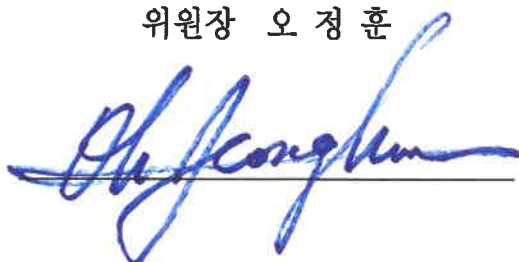
- 1. 노동이 존중되는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와 미디어 시장 공정경쟁:** 콘텐츠 혁신과 노동 존중이 병행되는 스마트미디어 환경과 공정경쟁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미디어 시장의 기반을 조성한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의 노동권 보호 정책 이행을 점검하고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 2. 언론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 강화:** 모든 미디어 노동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방송·신문·뉴스통신사의 편성·편집규약을 강화하고 그 이행을 위해 편성·편집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KBS, MBC, EBS에는 공적 책무를 독립된 법안으로 부여하고, 책무에 맞는 심사제도 개선 및 필요한 공적 재원의 확충과 신설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타 정당과 21대 국회 개원 직후 세 방송사의 공적 책무와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관련 상임위원회 내 협의체 구성에 노력한다.
- 3. 시민 참여와 결정에 따른 미디어 거버넌스 확립:** KBS, MBC, EBS의 이사 구성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가 법·제도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추천 기준과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준과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할 법안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시민이 방송에 대한 감시를 넘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및 유료방송 지역채널 등에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권한을 강화할 법안 개정에 노력한다.
- 4. 미디어 규제·진흥체제의 개혁:**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부처 설치 및 법제 일원화를 추진하고, 이를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혁신기구의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전담부처 및 법제 일원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의제로 제안한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공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젠더·장애인 등을 위한 언론 다양성에 기여토록 한다.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과의 역차별을 개선한다. 출판산업의 다양성 보호, 불공정한 출판 유통관행 개선 및 독자권리 신장을 위한 출판진흥정책의 수립을 추진한다.

5. **공적 소유 미디어의 독립성 확보:**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라 지배구조 및 재원에 영향을 받는 신문·방송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다. 이와 같은 신문·방송사의 독립성 확보와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노력한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아리랑국제방송원법 제정 및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 노력한다. 서울신문의 사장 선임 절차에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한다.
6.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상파 민영방송은 최대주주의 사익을 위한 사유물이 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2009년 개악되었던 지상파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 제한을 강화하고 지주회사를 통한 지상파 방송사 소유를 금지할 법 개정에 노력한다. 반복되는 지상파 민영방송 사주의 전횡으로 인한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 및 노동이사제의 도입, 지역민방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할 관련 법 개정을 적극 모색한다.
7. **미디어다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매체별로 분리된 공적 기금은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통합 미디어 규제·진흥 전담부처 설치 추진을 통해 분리된 각종 미디어 관련 기금을 미디어다양성 기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미디어다양성 기금은 지역신문·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우선 사용한다. 성장하고 있는 미디어 광고 시장의 진입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재원을 마련하도록 미디어랩 사업 영역을 확대할 관련법을 개정한다.
8.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약 내용을 추진함에 있어 소속 지·본부 및 구성원을 설득하고 이해를 강구하기 위해 협조한다.
9.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위 정책 과제 수행을 위해 21대 국회 개원 전후 2개월 내에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해당 지본부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2020년 4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오 정 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 정 식

